



# ‘원자력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서울대 원자핵공학 학사, 석사  
· 일본 동경대 시스템전자공학 박사

·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SAIS) 객원연구원  
·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초빙 교수  
·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위원 역임

〈원자력산업〉을 통해서, 원자력 관련 회사사 독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자력 규제를 담당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으로 201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 발표 등을 거치면서, 올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제4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전문성과 과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 공정하게 원자력 규제 업무 수행

규제기관의 장으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에 관해서는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원자력 규제에 있어서 안전이라는 가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훼손되거나 양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규제기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재 안전 기준이 충분한지 끊임없이 고민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과 깊이로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안전한 것을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규제

를 과도하게 억지로 적용해 원자력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줄 생각도 절대 없습니다.

전문성과 과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안전하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안전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만들 방법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원자력 규제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올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통과 참여 방식을 혁신하고, 원자력 안전 기준과 규제 체계를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화를 직접 느끼게 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투명성과 소통 강화

먼저 투명성과 소통을 강화해서 정부기관 중 가장 신뢰받고 투명한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의 독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회의록 공개와 일반인 방청 허용에 더하여, 실시간 회의 중계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을 한 점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나아가 원전 소재 자치단체장 또는 주민 대표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참여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칭「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정보 공개 제도를 개선하고, 원전 지역 주민과 소통을 위한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안전 기준과 규제 체계 한층 공고히

소통과 참여 방식을 혁신하는 한편, 원전 가동에서부터 해체까지 안전 기준과 규제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원전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가동 원전에 대해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형 지진에 대비하여 연말까지 가동 원전 24기의 안전 정지 유지 계통 설비에 대한 내진 보강을 0.3g(규모 7.0 수준)까지 완료하고, 원전 해체가 본격화되는 원자력 환경에 맞춰 고리 1호기 해체,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에 대한 규제체계도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드론, 고출력전자기파(EMP) 등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물리적 방호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악성 코드 등 사이버 위협을 체계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사건 탐지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대규모 원전 사고 시 사업자의 무제한 책임 원칙을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적용하고, 배상 조치액도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해 나가야할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원자력산업계의 노력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원자력산업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안전하고 투명한 원자력 환경 조성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